잘못된 선거로 홍역 치른 광주시체육회 이상동 회장 복귀 놓고 또 홍역 치르나

낙선자측 당선무효 소송 취하
9개월만에 직무 복귀 길 열려
클럽 붕괴사고는 재판 계류 중
정상 업무 수행 가능할지 우려

법원 판결로 직무정지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소송 취하로 업무 복귀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 계류중인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복귀가 무산될 수도 있어 광주시 체육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25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낙선자인 전갑수, 이강근 후보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5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전 후보 등이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체육회장 선거에서 대한체육회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했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직무대행체제로 돌입했고 이 회장은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상태다.

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낙선자들의 소송 취하로 법적으로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그대로 종결된다.

이 회장은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직무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선거 관련 민사소송과 별도로 본인에 대한 형사소추로 직무정지됐다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해 일단 직무복귀의 길을 열었다. 체육회 규정은 실형이 확정되면 임원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돼 있으나 대법에 상고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2심 형량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또다시 광주시체육회는 회장 공백사태를 맞게될 수 있다.

이 회장의 복귀에 대해 잘못된 선거행정으로 뽑힌 회장이 체육인들의 신뢰를 얻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당선무효 판결까지 받은 체육회장이 소송취하로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잘못된 선거행정으로 뽑힌 회장이 소송이 취하돼 아무일 없는 것 처럼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 회장도 낙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있는 선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 당사자들의 소취하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 지난해 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회장 부재의 장기화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체육회가 먼저 시기와 방법을 정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자체가 무효가 돼 책임질 일도 없어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인터넷서 내려받아 보관 대학생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관해온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모 사이트에 접속한 뒤 여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동영상을 내려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31개의 불법 영상을 내려받아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CD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것 외에 유포행위를 하지 않은 점,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설립 인가 지지부진 금동지역주택조합 광주 동구, 이례적 직무집행 정지 명령

"조합원 피해 우려"…조합측은 반발

광주시 동구가 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추진위)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조합추진위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지속하면서 기한 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2일 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직무집행 정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동구는 조합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신고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자 가입자 신규 모집, 각종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중단하도록 했다. 동구는 주택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조합추진위가 총회를 열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종결할지를 결정한 후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동구가 이례적으로 조합추진위 직무집행 정지라는 강수를 내린 배경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조합 회계, 조합추진위 신구 집행부 갈등,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 저조(19.05% 수준), 허위 과장 분양공고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데다 여러 논란에 휘말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총회를 열어 사업종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동구 판단이다.

금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광주시 동구 금동 71번지 외 223필지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한다. 조합추진위는 1만 4102㎡에 아파트 39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1월 사업 추진을 승인받았다.

한편 조합추진위 측은 "동구 행정명령으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예상된다"며 25일 동구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었다. 직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주도한 동구 건축과장이 지위를 남용해 위법한 행정명령이 취해지도록 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동구에 제출했다는 점을 밝히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쌓인 먼지 닦아내요 광주시 남구 공무원들이 25일 진월동 버스정류장 의자와 유리창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갑질·성희롱한 공무직 근로자 남구, 대기발령하고 징계 돌입

광주시 남구는 같은 부서 막내급 직원들에게 갑질·성희롱을 한 50대 공무직 근로자 A씨를 타 부서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남구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초 신입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으며,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 C씨에게도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직인 A씨는 직책상 사무직 B·C씨에게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이었으나, 자신의 긴 근무 경력을 앞세워 B·C씨 보다 우월한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숨 돌린 버스 파업

광주 총파업 1주일 연기…전남 2곳 이외 원만한 합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 돌입 시점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광주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버스노조와 사측 간 제2차 조정이 결렬됐다.

버스노조 측은 8.5% 임금 인상, 정년 65세 연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요구안을 내놨지만, 사측은 아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아 합의에 다다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노위 측은 "다음 달 2일까지 요구안을 내놓고 조정에 임하겠다"는 사측 입장을 받아들여 5월 2일 제3차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차 조정 기일이 잡히면서 광주 시내버스 파업도 1주일 연기됐다.

광주 시내버스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며 "사측 요구안을 보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순천과 고흥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파업에 돌입한 순천교통, 동방고속(고흥·여수 구간 통근버스)은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해 3차 조정이 결렬돼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